

光州日뢖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1174호 1판 (음력 12월 20일) **2020년 1월 14일 화요일**

호남 야권 제3지대 신당 추진 민주당과 1 대 1 구도 이룰까

뉴스초점

4·15 총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민족 명절인 설을 전후해 정치권의 이합집 산이 본격화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특 히,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뿌리로 하는 소수 야당들이 제3지 대 신당의 단일대오를 형성한다면 호남에 서 민주당과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전체 총선 판을 뒤흔들 수도 있어 정 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창당 이틀째를 맞은 대안신당은 제 3세력 통합 드라이브에 나섰다. 대안신당은 과거 국민의당에서 함께 했던 바른미래당 호남세력과 민주평화당과의 재결합을 제3지대 통합을 위한 1차 목표로 삼고 있다. 우선 설 명절 전에 통합 원탁회의 구성을 가시화하고 이후에 본격적인 논의를 가져간다는 계획이다. 통합 논의가 어느정도가닥을 잡으면 2월 중순에는 대대적인 외부 인사 영입 등을 통해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나선다는 것이다.

대안신당 최경환 대표는 이날 광주일보 와 통화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 원들 간에는 이미 통합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설 명절 전에 통합을 위한 원탁회 의 구성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 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제3세력 통 대안신당·바른미래·평화당 설 전 원탁회의 통합 공감대 통합 시너지 효과 내려면 일부 중진의원 2선 후퇴해야

합 추진'에 공감을 나타냈다. 손 대표는 이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대안신당 최경환 대표의 통합 제안을 언급 하며 "바른미래당도 제3세력 통합으로 우 리나라 정치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 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안신당 유성엽 통합추진위원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통 합의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여기에 천정 배, 박지원 의원 등이 외부 인사 영입에 공 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제3지대 신당 창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현역 의원들의 정치적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합에 '혁신과 미래'를 담는 것이 숙제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 인사 영입과 일부 중진 의원들의 2선 후퇴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3지대 신당 창당이 성공한다면 호남에서 민주당과의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현역 국회의원들은 나름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신당 바람이 분다면 승부를 점칠 수 없는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 3지대 신당이 호남 주도의 제4기 민주 정부 창출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어서 호남 유권자들이 인물론을 토대로 '일당 독점' 보다는 '경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 당의 통합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로운보수당 하대경 책임대표는 이날 국회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통합과 혁신 통합으로의 한걸음 전진"이라며 한국당과 의 통합 대화 개시를 발표했다. 하 대표는 한국당 최고위원회가 '혁신통합추진위원 회' (혁통위)의 '6원칙'에 동의한 것은 새 보수당이 요구해 온 '보수재건 3원칙'을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제3지대 신당이 성공적으로 창당된다면 보수와 진보의 거대 정당 사이 에서 '중도와 견제'의 입지를 확보할 가능 성과 함께 민주당과 선거 연대 등에도 나 서면서 총선 판을 흔들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내 총리의 미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회의장 앞에서 동료의원들과 기념촬영을 마치고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모두 처리 … 검찰개혁 입법 완료

'유치원 3법'도 통과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13일 국 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 총 리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가결했 다. 투표에는 278명의의원이 참여했으며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 월 17일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

다. 이로써 정 후보자는 이낙연 총리에 이어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46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 후보자에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세균 총리와 함께 정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직을 수행하게 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또, 전남 출신의 이 낙연 총리에 이어 전북 출신의 정세균 총 리가 임명되면서 호남 출신이 잇달아 총 리직을 맡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로 지명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 만 이날 표결에는 참여했다.

이날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35 분 간의 무기명 투표가 끝나고, 한국당 의 원들은 대부분 표결만 마친 뒤 본회의장 을 떠났다. 정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처 리됨에 따라 이낙연 총리의 당 복귀도 이 번 주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 정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 안을 처리했다.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처리됐다.

형소법 개정안은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고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돼 검경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이 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국회를 통 과하면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입법은 모두 완료됐다.

ㅜ 단표졌어.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iu.co.kr



대형마트 주차장 유료화로 교통지옥 ▶6면

오월, 역사에서 일상으로 ▶9면

굿모닝 예향-예술의 거리 작가들▶18·19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 광산대학교 www.kwangshin.ac.kr

흑산공항 건설 총선 뒤로 밀렸다

국립공원위, 심의 늦춰

흑산공항 건설사업을 위한 환경부 국립 공원위원회(이하 국립공원위) 심의가 결 국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국토교통부와서울지방항공청이환경부 입장 변화를 가늠하기 어려운데다, 자칫 총선과 맞물려 정치적 변수의 영향력까지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해 국립공원위 심의를 총선 뒤로 늦추기로 하면서다.

환경부 심의 절차가 당분간 결론 나지 않은 채 표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루빨리 흑산공항 건설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고대해온 4300여명 흑산도 주민들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흑산 공항을 개발, 해양관광과 내륙관광을 아우르는 남해안 신

성장 관광벨트(블루 투어)를 구축하겠다 는 구상도 더디게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남도도 속만 태우고 있다.

13일 전남도와 서울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은 4월 총선 이후로 흑산공항 건설에 필요한 심의 서류를 보완해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총선 전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 환경부 국립공원위 심의를 요청할 게획이 없다" 고 밝혔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개 발과 보전을 둘러싼 논쟁이 비등해질 경 우 자칫 '정치 논리'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게 서울항공청 입장이다.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보완할 서류가 많 아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환경부가 최근 국토부에 '제주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의 '재보완'을 요청한 점을 살펴보 니 흑산공항 관련 서류에서도 참고할 부분 이 생겼다는 것이다. 자칫 심의를 요청했 다가 '부결'될 경우 '설악산 오색케이블 카' 사업과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는 만 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남도와 항 공청 내부 분위기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 회의 입장 변화 분위기를 찾기 어려운 점 도 반영됐다. 공항 건설을 결정할 키를 쥐 고 있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일부 민간 위원(2명) 임기 만료(2019년 9월) 이후 에도 위원 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제 4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흑산 공항 건설계획'까지 고시한 국책사업이 '백지화'되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지지 않 도록 조속한 정부부처 간 합의와 결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급하나는 시석이 나오고 있나.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